

제 1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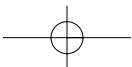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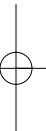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10조



제 1 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 및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2001년 11월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뜻 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인권 전담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 관련 법령·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탄생을 의미한다.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한층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관행 등 인권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제고도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인권 감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구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태동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원을 가지며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및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성숙되어 온 논의의 결실이라는 의미다.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국가인권기구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9세기 초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에서 출현하였다. 이 제도는 삼권 분립 체제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삼권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는 국제인권법과 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온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통해 재편되면서 유엔이 자연스럽게 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활동 과정에서 각 나라들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집단(Information Groups) 또는 국가 단위의 인권위원회(Local Human Rights Committees)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권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1976년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유엔의 인권 기준 설정 작업의 일환이었다. 인권 전반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의 효력 발생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 국내 기구이면서도 국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를 촉진하고 인권보장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

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Principle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일명 “파리원칙”)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와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 준칙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파리원칙」은 먼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적어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구현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헌법 개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정기관으로 만들 경우에도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등 네 부분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들을 각 나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1992/54)와 파리원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후 1994년 7월 서울에서 제3차 아·태지역 인권 워크숍, 1995년 11월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 등이 차례로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열리고, 1996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인권대회에 참가하는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약하였고, 당선 후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제도권 내에서도 급속히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는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시켰고, 같은 해 10월 인권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하는 인권법 시안의 주요 내용이 법무부 산하기구로 추진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사실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입법 과정의 최대 모순은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법무부가 법안을 기초하고 입법 과정을 주도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입법 구도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사·구제 기능 때문에 누구도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처음부터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서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감시 대상인 법무부가 부당하게 국가인권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 통로들을 원천봉쇄하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는 1998년 9월, 29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공추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정부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각 정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이후 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9년 4월 공추위는 7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재편, 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공대위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다가, 2001년 4월에 이르러서야, 공대위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까스로(재적의원 273명,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 통과되었다.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시도를 극복하고 최종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하였다. 위원회 및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면책특권 미부여, 인권위원 임명시 청문회나 국회 동의 절차 미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조사대상 기관의 제한, 동행명령권·증인신문제도의 부재 등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인권단체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투쟁이 ‘절반의 승리’로나마 귀결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2001년 5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24일 법률 제6481호로 공포된 위원회법은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3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법은 통과되었으나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 ‘독립적 국가기구’라는 독특한 위상과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관 출현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민간단체 논의를 대변해 오던 공대위는 권한이 축소된 위원회법 제정을 비판하며 2001년 5월 해체하였다.

2001년 8월 1일,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창국 변호사가 내정되고 위원회 출범 시한인 11월 25일을 3개월여 앞둔 8월 20일, 국무총리 훈령 제420호로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파견 공무원 8명, 민간 출신 전문가 7명 등으로 행정지원반과 법제운영반을 구성, 초기 설립준비 작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획단은 시행령 및 규칙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안 준비,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시안 준비, 사무처 구성안 준비 등의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인권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위원의 임명 지연 등으로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출범을 겨우 40여 일 앞둔 10월 9일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리고 자신이 지명한 4인 등 모두 11인의 인권위원을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인권위원들은 임명되었지만 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 당시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상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들도 보다 용이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국가인권위원회소속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을 성안하였으나 정부 부처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위원회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나 직원 정원 및 채용방법 등과 관련하여 인사 주무 부처와의 이견으로 인해 그때까지 직제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기획단은 2001년 11월 24일 자동 해산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을 제정하여 ‘사무처 설치를 준비하고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임시사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설치하였다. 준비단의 주된 역할은 시행령, 직제령 및 위원회 규칙과 규정, 업무지침 시안의 준비, 사무처의 조직과 인사 및 예산안 편성, 청사 확보, 위원회 운영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2001년 11월 26일, 사무처 소속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기구가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파행 출발이었지만,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접수를 시작한 첫 날 122건의 진정을 접수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마음속으로 향해를 시작하였다.

관련 부처의 지나친 견제로 인해 시행령과 직제령이 2002년 2월 초에야 확정되었고, 2001년 10월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청된 최영애 사무총장 내정자가 4개월여가 지난 2002년 2월 19일 임명됨에 따라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한동안 운영되게 되었다. 이후 약 한달 반 동안의 직원 채용 과정을 거쳐 구성된 사무처는 2002년 4월 초에야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직제령 제정 과정 못지않게 시행령 제정 작업도 만만치는 않았다. 당시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령은 제정하긴 했으나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었다. 관련부처의 반대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관행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이후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위,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권협약의 담당부서 지정’을 규정한 조항 등이 각 부처의 반발로 끝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년간 위원회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범국가적 인권정책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이 문제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결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히 한 국가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의 발현이다. 이제 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그 출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개략할 수 있다.

첫째, 위원회의 탄생은 국제인권기구의 국내적 실행, 즉 인권 관련 ‘준국제기구’의 국내 출범을 의미한다. 위원회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인권이 더는 단순한 국내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며, 각 나라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규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탄생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가 그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기존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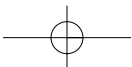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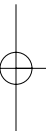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셋째,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비록 권한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관할 영역이 광범위한 편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등에서 벌어지는 18개 유형의 차별행위를 모두 관할하는 차별조사·구제 업무도 수행한다.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 등 330여 개 구급시설 외에도 900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도 감시의 대상이다.

넷째, 인권 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구제뿐만 아니라, 그 동안 구제 절차가 복잡해 차별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장애인·아동·노약자·성적 소수자·부랑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점증하는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보다 앞서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문제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이에 따라 진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발도상국에서만 아니라, 차별행위 구제를 국가인권기구의 중점 업무로 취급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국민들이 국가인권기구에 거는 기대 수준이 갈수록 상승된다는 의미다.

이제, 우리나라는 위원회의 역할을 통해, 그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후진적인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인권 선진국으로 발

돕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앞장서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이행을 앞당기는 견인차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 2 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정 사항에 대해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3개의 소위원회는 위원회법 제19조제1호, 제8호,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1소위원회, 제19조제2호 및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2소위원회 그리고 제19조제3호 및 제30조제1항제2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3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은 당초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정원 321명을 정부의 조직담당 부처에 요구하였으나,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조정되는 등 위원회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5국 18과 1소속기관, 정원 180명(파견 공무원 20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15명은 별도 합의)으로 조정되었다. 사무처에 총무과, 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및 교육협

제 1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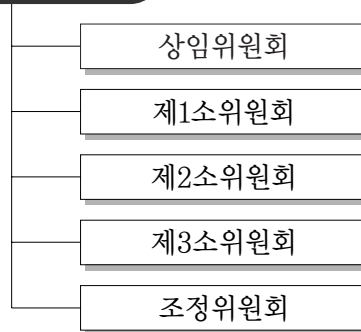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력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며, 소속기관으로 인권자료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소속기관직제」는 2002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되었으며 위원회 기구도는 <그림1-2-1>과 같다.

〈그림 1-2-1〉 위원회 및 사무처 기구도

위원회 기구도

전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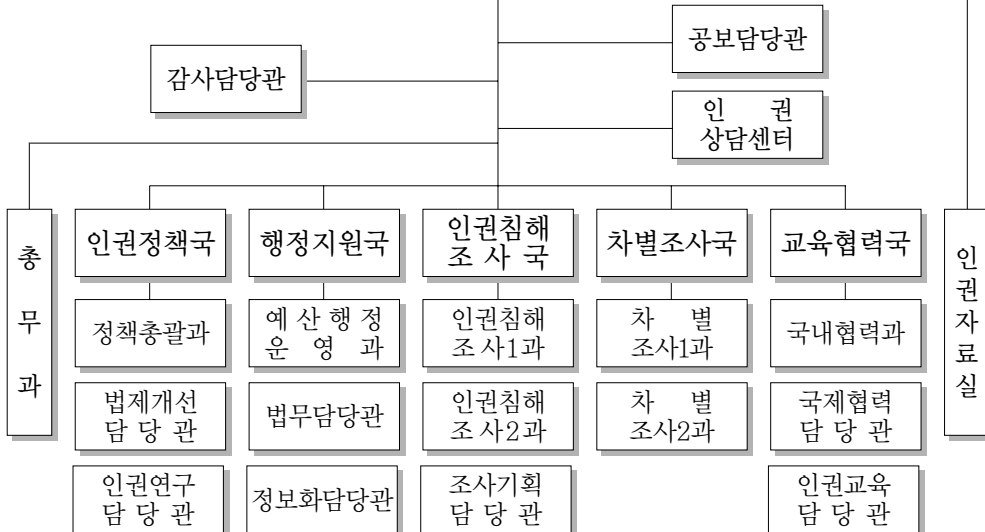


※ 2003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가 각각 제1, 2, 3 소위원회로 개칭됨

사무처 기구도

위원장

사무총장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부처와 협의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은 192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표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53억원(27.6%),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기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 기본사업비가 94억원(48.9%), 인권 관련 홍보 등 주요 사업비는 45억원(23.5%)으로 대부분 기관 설립에 따른 청사 확보 및 집기구입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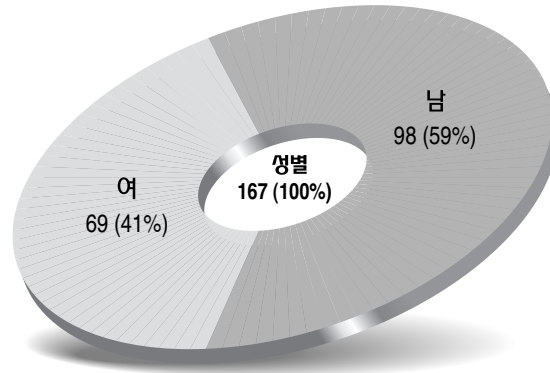
<표 1-2-1> 2002년도 예산

(단위:백만원)

계	인건비	사 업 비			비 고
		소 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19,203	5,309	13,894	9,372	4,522	
(100%)	(27.6%)	(72.4%)	(48.9%)	(23.5%)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이 제정되자 위원회는 사무처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1월 제1차 공무원 전입 31명을 시작으로 2월 15일 사무처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 <표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1일 현재 167명(정원 180명)의 인권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69명(41%), 남성 98명(59%)으로 여성의 비율이 타 국가기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직종별 구성도 정무직 4명(2%), 일반직 70명(42%), 별정직 49명(30%), 기능직 31명(18%), 계약직 13명(8%)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으로는 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330여 개 구금시설과 900여 개 보호시설에 대한 조사와 차별행위 개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1-2-2〉 직원 성별 분포(2002.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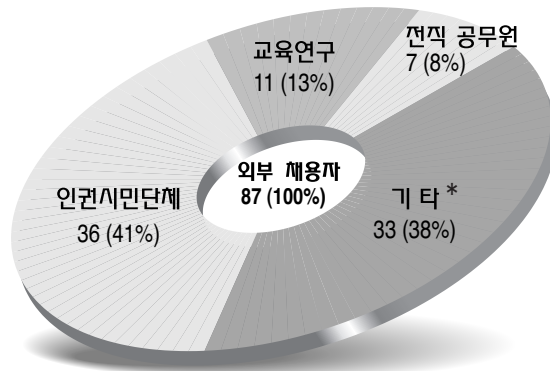
※ 2003. 3월말 10명 추가 발령 예정

〈표 1-2-2〉 직원 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기존 공무원	외 부 채 용
계	167(100%)	80(48%)	87(52%)
정 무 직	4(2%)	-	4(5%)
일 반 직	70(42%)	65(81%)	5(6%)
별 정 직	49(30%)	3(3%)	46(53%)
계 약 직	13(8%)	-	13(15%)
기 능 직	31(18%)	12(16%)	19(21%)

〈그림 1-2-3〉 외부 채용자 분포(명)



* 민간기업, 공기업, 언론, 정당 등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책 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정책 기능은 위원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 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청문회 운영(제23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8조) 등은 위원회가 정책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들이다.

인권 교육·홍보 기능(제19조제5호)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제26조제2항),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제26조제3항),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 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제26조제4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요청 또는 공동연구(제26조제5항),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제26조제6항)할 수 있다.

조사·구제 기능(제19조제2호 및 제3호)으로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제30조),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 조사의 방법(제36조) 등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국가권력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즉,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는 <그림 1-2-4>과 같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상임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제40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국내외 협력기능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제8호)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사항(제19조제9호)을 명시하고 있다.

제 1 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그림 1-2-4〉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

